아태연구 제24권 제2호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김기동** 이정희***

| 목 차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분석의 틀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요약 및 함의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그들의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며, 신뢰를 일반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한다. 특히 일반신뢰에는 우리 사회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고, 공적신뢰에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또한 정치참여의 유형은 투표참여, 정당참여, 시위참가, 그리고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는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이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높을 경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 증진을 통해 투표참여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시민들과 엘리트 사이의 연계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면, 시민주도형의 참여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임을

*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발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세 분의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함께 고민을 해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6학년도 2학기 <한국이익집단정치연구> 수업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www.kci.go.kr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학력이 모든 정치참여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반면, 연령은 투표참여와 시위참여 각각에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사회적 자본, 신뢰, 일반신뢰, 공적신뢰, 정치참여

Ⅰ. 서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택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에서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수준의 선거참여를 통한 투표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집단 또는 시민단체 참여행위,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편지를 통한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청원서 서명과 시위 및 정치행사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 방식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여러 정치참여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애써왔다.

이러한 부류의 대표적인 분석으로 사회경제적 모델(Socioeconomic Status Model, SES Model)이 있는데, 이는 정치행위자로서의 개인이 가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고유한 속성에 따라 정치참여 유형과 그 정도를 달리한다고 설명한다(Verba & Nie 1972). 보통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활발한 정치참여 수준을 보이며,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모델이 제시하는 명제가 한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강원택 2008 등). 즉, 한국에서는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오히려 더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이는 등 서구 이론과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론의 분석 논리 역시 한국적 현실에서는 그 설명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적 자본 역시 개인의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제시되곤 하는데, 그것의 주요 논지는 다음

www.kci.go.kr

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시민들 간 신뢰의 확대는 집단참여를 통해 타협 및 협력 등의 민주적 가치를 증진시키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성장을 통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우슬러너 2013; Krishna 2002). 그러나 박희봉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 사적신뢰가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 간 일반적 신뢰의 확대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 이론이 여전히 그 설명력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인 신뢰를 토대로, 한국 시민들의 여러 정치참여 유형과 그 강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다원주의적 전통을 가진 미국 등의 서구국가들에서는 투표참여를 넘어서서, 시민들이 집단참여와 가두시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참여 유형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도묘연 2015). 그러나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집단참여나 시위 등의 행위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에 참여하고 있는 수가 점차 증대되고 있고,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 SNS의 발달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접촉을 용이하게 했으며, 또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를 기점으로 최근까지도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유형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향후 한국 시민사회 발전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치참여 유형 구분

반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은 현대 대의정부에게

www.kci.go.kr

항상 강조되는 요소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말해주는데, 지금껏 여러 학자들은 대중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밀브레스와 고엘(Milbrath & Goel 1977)은 정부와 정치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들의 유·무형의 모든 행위들을 정치참여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지도자에게 지지를 보낼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지와 반대의 표현은 투표참여나 시위 등의 실제 행동양식과 더불어 단순한 의식적 지지 역시 폭넓게 포함한다. 한편, 헤이그와 해롭(Hague & Harrop 1982)은 일반 시민들이 정부의 구성이나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들이 정치참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치참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치 체계 전반과 정치엘리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와 같이 정치참여의 일반적 의미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다음으로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정치참여의 유형 구분은 시민들 간 정치참여 양태와 참여수준의 차이를 밝혀내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선 연구들은 정치적 자원과 정치적 관심의 차이로 인해 시민들 간 정치참여의 편향성이 나타남을 지적한 바 있다(Milbrath & Goel 1977; Putnam 1976; Verba et al. 1995).

정치참여의 유형 구분으로는 첫째, 합법적 혹은 관습적 참여와 비합법적 혹은 비관습적 참여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Milbrath & Goel 1977; Hague & Harrop 1982; Huntington & Nelson 1976; 박상필 2011). 여기서 합법적인 참여는 투표, 선거운동 활동, 정당 활동, 공무원 및 정치인 접촉 등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권 내에서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반면, 비합법적인 참여는 시위 등 전통적 제도권 정치 영역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둘째,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정치참여를 효용의 논리로 파악함으로써 쉬운 참여와 어려운 참여 등으로 나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주기에 걸쳐 열리는 선거에 참여하는 소극적 참여와 일상적으로 가능한 시민사회 활동, 청원서 제출, 공무원 및 정치인 접촉, 시위 등의 적극적 참여

www.kci.go.kr

로도 구분될 수 있다(Downs 1957; Inglehart 1990; 김욱·김영태 2006; 김욱·이이범 2006). 셋째, 더 직접적으로는 정치참여 유형을 선거참여와 비선거참여로 구분하기도 한다(이숙종·유희정 2010). 더군다나,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치참여의 유형은 인터넷 토론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확대되어 더욱 다양해짐과 동시에 복잡해졌다(신소연·이상우 2012). 이러한 정치참여 유형 구분은 선거를 통한 투표행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최근의 투표율은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참여 방식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욱 2009).

위와 같은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바탕 위에서, 본 연구는 '2014년 지방선거참여', '정당참여', '시위참가', 그리고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등 네 가지 정치참여를 각각 다루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 네 가지 정치참여는 여러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령 선거참여, 정당참여,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을 합법적(관습적) 참여로, 그리고 시위참가를 비합법적(비관습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은 첫째, 합법적 정치참여 유형 내의 서로 다른 하위 참여 유형 간의 차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참여와 정당참여는 가장 대표적인 합법적 참여 유형에 속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당참여의 수준이 선거참여의 수준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양자를 굳이 동일한 참여유형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각각 분리하여 따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리라 판단하였다. 둘째, 비합법적 참여유형에 속하는 시위참가가 전통적인 제도권 정치영역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비합법적(illegal)이라고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김욱 2010).[1)]

또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선거참여와 정당참여를 '쉬운 참여'로, 시

1) 시위를 비롯한 보이콧, 파업, 점거농성 등의 다양한 저항 행위가 과거와는 다른 양태로 표출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즉, 정치적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불만 세력에 의해 이뤄지기보다 오히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개인생활에 만족하는 중상위 계층들이 그들의 이익을 표출하기 위해 저항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Van Aelst & Walgrave 2001; Norris et al. 2005; Rucht 2007).

www.kci.go.kr

위참가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을 '어려운 참여'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하여 유권자가 서로 다른 유형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의 계산에 근거한다.[2] 하지만 여기서의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이 애매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형 구분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즉, 선거참여와 정당참여 등 쉬운 참여의 경우, 유권자들이 큰 비용 지불 없이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것은 비용 계산을 매우 단순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는 '쉬운 참여'의 유형에 실제로 참여할 때에도 시간적 비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과 더 나아가 정신적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을 적용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4년 지방선거참여', '정당참여', '시위참가', 그리고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등 네 가지 정치참여를 각각 다루고자 한다.[3]

2.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사회적 자본 논의를 통해 정치참여를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송경재 2013; 이숙종·유희정 2010; 김병록 2011; 신소연·이상

2)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거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에는 정치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매우 적으며, 단지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투표 행위에 따르는 비용은 시간, 거리, 등록의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이상신 2014). 그리고 정당 가입 역시 최근에는 지지정당에 대한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쉽게' 가능하다. 반면, 시위참가나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등의 정치참여는 상당한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비용을 수반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회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참여를 위한 결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정치참여의 유형과 관련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익집단참여'를 별도의 유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집단은 세부적 유형으로서 '사용자집단', '노동자집단', '전문가집단', 그리고 '공익집단' 등으로 나뉠 수 있다(이정희 1994).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이익집단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은 정치참여로서 이익집단참여를 분석하는 데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독립적인 연구로서 엄밀히 수행될 필요가 있는 주제일 것이다.

www.kci.go.kr

우 2012 등).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처음 사용했던 인물은 하니판(Hanifan)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이웃과 접촉하고, 그들이 또 다른 이웃들과 접촉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수록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다고 보았다(Hanifan 1916). 이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브루디외(Bourdieu 1986)나 콜먼(Coleman 1988) 등에 의해서 활성화되었다. 먼저, 브루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한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됨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자원의 한 유형으로서 실제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자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했다(Bourdieu 1986). 또한 콜먼은 사회적 자본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파악했는데, 그는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구조 속에서 발달된 사회적 자본이 여타의 다른 자원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재할 경우 달성하기 힘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Coleman 1988).

이후 퍼트남(Putnam 1993; 2000)과 후쿠야마(Fukuyama 1995) 등의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자본 이론은 더욱 정교하게 발전한다. 이에 대한 논의가 흥미로운 점은 학자들마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조금씩 달리 여김에 따라 그 내용 역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공동체의 특징으로 정의했는데, 그가 언급한 여기서의 특징이란 바로 사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일컫는다(Putnam 1993).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퍼트남이 파악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였다. 한편, 후쿠야마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규범으로 파악했다. 특히, 그는 여기서의 규범이 단순한 추상성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신뢰라고 보았다. 즉 후쿠야마가 파악한 사회적 자본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신뢰로서, 거칠게(roughly) 표현하자면 심지어 사회적 자본과 신뢰는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Fukuyama 1995).

이처럼 학자들 간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이 상호주의적 개념이라는 점, 둘째, 그것은 공유를 통해 생성되고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 셋째, 사회적 자본을 이루고 있는 공통적 구성 요소로서 신뢰

www.kci.go.kr

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 논의에서의 신뢰는 구성원들 간 협력과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건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울 수 있다고 여겨진다(우슬러너 2013). 이는 곧, 신뢰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증진이 민주주의의 구축과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유재원 2004; 조기숙·박혜윤 2004). 상호 신뢰를 공유하는 사회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 간 자발적 참여가 증진될 수 있고, 이것은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즉,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주도형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Inglehart 1990; Putnam 1993; Fukuyama 1995; Krishna 2002; Veenstra & Lomas 199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뢰를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 양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신뢰수준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은 향후 활발한 참여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뢰의 두 가지 유형과 정치참여

민주적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신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왔다(Inglehart 199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신뢰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 논의 속에 자리하고 있는 신뢰를 조작화하는 방법론적 문제는 상당히 진지하고 오랫동안 논의되어져 왔다(Yamagishi et al. 1999; 조기숙·박혜윤 2004). 그리고 그 논의의 핵심은 측정 타당성의 문제와 직결되는데, 이는 측정하려는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와 관련된다.

이러한 문제는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기법의 발전과 더불어, 측정 대상으로서의 신뢰를 더욱 세분화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신뢰는 그것이 지닌 다층적 속성에 의해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퍼트남은 신뢰를

www.kci.go.kr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러한 구분에 대해 양자의 논리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별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Putnam 2000, 223). 즉 퍼트남에 따르면, 전자가 높은 경우라도 후자가 낮을 수 있고, 그 역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신뢰 유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경고하고자 했다.

우슬러너(Uslaner 2013) 역시 신뢰를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하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에는 친구와 가족, 또는 낯선 사람들이 포함된다. 반면, 공적신뢰에는 정부 등의 공공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속하게 된다. 우슬러너의 타인에 대한 신뢰는 공적신뢰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사적신뢰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시금 낯선 사람들을 의미하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generalized trust; thin trust)’와 친구 및 가족 등 아주 ‘가까운 대상에 대한 신뢰(particularized trust; thick trust)’로 더욱 세분화되기도 한다.

신뢰의 유형에 대한 명명 방식은 학자들마다 다를지언정, 그것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명확하다. 즉, 사적 영역(사회에 대한 신뢰)과 공적 영역(정부에 대한 신뢰) 간의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가족, 일반인, 사회 일반 등 비제도적 대상에 대한 신뢰 정도를 ‘일반신뢰’로, 정부, 국회, 정당, 사법기관, 기업 등에 대한 신뢰 정도를 ‘공적신뢰’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이동원·정갑영 2009; 송경재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의 유형에 대한 기존의 구분을 수용함으로써 일반신뢰와 공적신뢰를 중심으로 한국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신뢰는 개인과 개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대인 간 신뢰를 넘어서서, 불특정한 대상에 대한 신뢰 역시 포함할 수 있다. 즉, 이는 미시적 수준의 신뢰가 거시적 수준으로 전환되는 좋은 예로서 제시될 수 있는데, 신뢰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추상적이고 집합적이기도 하다(박병진 2007, 77). 그러나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반신뢰는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Putnam 2000).[4] 다시 말해서, 적극

www.kci.go.kr

적인 정치참여 및 공동체 활동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빈스트라와 로마스(Veenstra & Lomas 1999)는 높은 수준의 일반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쉽게 협력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으며, 퍼트남 역시 일반신뢰와 시민들 간의 연대 사이에는 매우 강력한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Putnam 1995). 뿐만 아니라, 토크빌(1997)도 신뢰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자발적인 단체에의 참여를 통한 정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저개발국가의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힘쓰기도 한다(송경재 2013, 226).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곽현근(2007)이 투표참여에 있어서 이웃신뢰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 바 있다. 송경재(2013) 역시 타인에 대한 신뢰가 투표참여와 시위참여 모두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홍성모 외(2011)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규명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공적신뢰는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정당, 사법부 등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공적신뢰와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자를 부정적인 관계로 파악하기도 한다. 국가의 비대하고 억압적인 관료 조직에 대항함으로써 정치 단체 가입 및 활동, 시위 등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역량이 발휘되어 참여집단 혹은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기도 한다(Foley & Edwards 1996). 이러한 시각은 양자 간의 관계를 저항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논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치참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대안적 논리도 존재한다(콘드커 2004; Evans 1996). 즉, 공공기관의

4) 하지만 모든 일반신뢰가 참여에 긍정적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같이 혈연·지연·학연 등 매우 협소한 범위에서의 강력하고 폐쇄적인 신뢰는 오히려 외부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Newton 1999; Berman 1997; Fukuyama 1995). 이와 같이 일반신뢰는 상반되는 두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와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로 다시금 구분되기도 한다(우슬러너 2013).

www.kci.go.kr

공정한 법집행 체계와 정부의 공공사업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공적신뢰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높아진 공적신뢰는 안정적인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성숙한 민주주의의 형성은 사회적 자본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양자 간의 선순환적 관계 덕분에 이는 다시금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Rothstein & Stolle 2008; Maloney et al. 2000).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 왔다. 장수찬(2002)이 국가기관에 대한 공적신뢰와 정치참여수준이 부(-)의 관계에 있음을 밝혀낸 반면, 송경재(2013)의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공적신뢰가 투표 등의 관습적 참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촛불집회나 대중시위 등의 비관습적 참여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양가적인(ambivelnt)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곽현근(2007)은 공적신뢰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는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었고, 박희봉 외(2005)의 연구에서도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오직 정부기관에 대한 접촉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외의 정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혀낸 바 있다.

Ⅲ. 연구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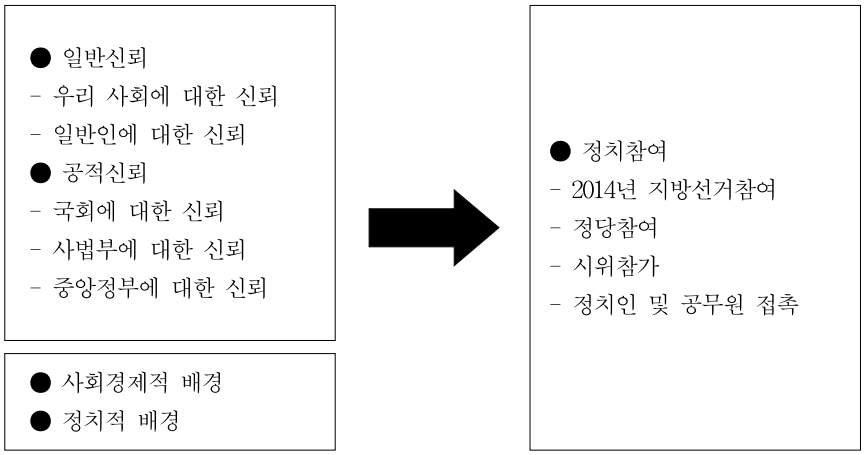
1. 분석모형과 주요 변수 설정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시민들이 가진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정치참여의 유형은 '2014년 지방선거참여', '정당참여', '시위참가', 그리고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 변인인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특히 신뢰에 주목함으로써 이를 일반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하였다.

www.kci.go.kr

<그림 1>은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2014년 지방선거참여', '정당참여', '시위참가', 그리고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등 네 가지로 상정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의 참여를 주요한 종속변수 중 하나로 상정한 이유는 데이터 접근의 용이성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개인 및 집단 간의 관계에 기반한 상호주의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유대가 신뢰 형성에 결정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성된 신뢰는 지방선거참여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림 1> 분석모형



먼저, 선거참여 여부와 정당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살펴본다. 응답자들은 선거참여 여부에 대해 "투표했다"와 "투표하지 않았다"의 응답 중 하나를 선택했고, 정당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한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다", 그리고 "소속된 적 없다"의 응답 범주 중 하나를 선택했다.[5] 다음

5) 일반 시민들의 정당참여 여부를 묻는 조사 문항에서 응답자의 95%를 차지하는 대다수가 정당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다" 또는 "소속된 적 없다"라고 응답). 반면, 정당에 참여하는 비율은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의 응답이 0.5%, 그리고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한다"의 응답이 4.5%로서 오직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래의 실제 통계분

www.kci.go.kr

으로, 시위참가 여부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시도에 대한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살펴보면, 두 문항은 모두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그보다 오래전에 한 적이 있다”, “전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6]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에서 종속변수인 네 가지 정치참여 세부 유형에 따라 적합한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2014년 지방선거참여’와 ‘정당참여’ 모델에 대해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시위참가’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모델의 경우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각각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일반신뢰로서 포함되었고, 공적신뢰에는 ‘국회에 대한 신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었다.[7] 전술했듯이,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인가의 문제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뢰의 대상과 관련하여,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통해 일반신뢰의 유형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Putnam 2000; 우슬러너 2013; 송경재 2013 등).[8] 공적신뢰의 유형은 그 대상에 있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

석에서는 선거참여 여부와 마찬가지로, 정당에 “참여한다”와 “참여하지 않는다”의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취급하고자 한다.

6) 이러한 측정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경험한 적이 있다는 ‘실제 행동’과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잉글하트(Inglehart 1990)는 첫째, 실제 행동은 태도나 의도에 의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둘째, 실제 행동만을 토대로 측정을 한다는 것은 설문조사의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지적한다.

7)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2014년 지방선거참여’인데 반해, 독립변수가 ‘국회, 사법부, 중앙정부’ 등 지방수준이 아닌 중앙수준의 기관에 대한 신뢰라는 점에서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본질적으로는 ‘지방적 행사’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중앙정치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전국적 행사’라는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강원택 1999; 김용철 2010).

8)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일반

www.kci.go.kr

두 포함할지, 또는 집권정부, 공직자, 정책까지도 포함시킬지에 대해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이숙종·유희정 2010, 295). 본 연구에서는 공적신뢰의 대상을 국회, 대법원, 중앙정부부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측정에 있어서 분석 대상의 수준(층위)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국회, 대법원, 중앙정부부처는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9] 신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응답자에게 특정 대상에 대한 신뢰수준을 직접적으로 물음으로써 스스로 응답하는 방법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직접적 측정 방식은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이용된 측정 방법과 유사하다(우슬러너 2013; 송경재 2013; 이숙종·유희정 2010; 장수찬 2002 등).

또한 측정 척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신뢰 중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세 가지 공적신뢰 유형은 1(낮은 신뢰수준)에서 3(높은 신뢰수준)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의 경우 0(매우 믿을 수 없다)에서 10(매우 믿을 수 있다)까지의 11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제 분석에서는 0-3점을 "낮은 신뢰수준", 4-6점을 "중간 신뢰수준", 그리고 7-10점을 "높은 신뢰수준"으로 리코딩(recode)하였다. 이는 독립변수 간 측정 척도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신뢰'의 유형에 포함시켰지만, 사실 양자는 '일반신뢰(대인신뢰)' 중에서도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 또는 thin trust)'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신뢰(대인신뢰)'는 '일반화된 신뢰'와 더불어,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 trust 또는 thick trust)' 역시 포함하기 때문에 후자에 대한 설문 결과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는 '특수화된 신뢰'에 대한 문항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뢰를 '일반신뢰'와 '공적신뢰'만으로 구분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진행에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이동원·정갑영 외 2009; 송경재 2013; 이영원 2013).

9)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혹은 청와대에 대한 신뢰를 포함할 수 도 있겠으나, 이는 정치적 선호에 따른 판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혹은 청와대에 대한 신뢰 대신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를 포함시켰다.

www.kci.go.kr

<표 1> 주요 변수의 설명 및 측정

구분	변수	항목	측정 문항
종속변수	정치참여	투표참여	“귀하는 지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정당참여	“귀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시위참가	“귀하는 ‘시위에 참가하기’와 같은 행동을 지난 1년 동안 혹은 그 이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귀하는 ‘정치인 및 공무원과 접촉 또는 접촉시도’와 같은 행동을 지난 1년 동안 혹은 그 이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독립변수	일반신뢰	우리 사회 신뢰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 신뢰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적신뢰	국회 신뢰	“귀하는 ‘국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법부 신뢰	“귀하는 ‘대법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정부 신뢰	“귀하는 ‘중앙정부부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제변수	사회경제(SES)변수	성별	“귀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연령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 입니까?”
		학력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가구소득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세금공제 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거주지역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변수	이념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 일체감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현 정부 평가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현 정권이 국정 운영을 어느 정도 잘 하거나 또는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적 효능감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주기 어렵다.”
		외적 효능감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

www.kci.go.kr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두 가지 신뢰 유형 외에 종속변수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경제적 조건 변수들과 개인의 정치적 변수들을 통제하고자 했다. 먼저, 사회경제적 변수는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정치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통제변수로 포함된다(정수현 2012; 이갑윤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성별(남성=1), 연령(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력(고졸 미만=1, 고졸=2, 대재 이상=3), 가구소득, 거주지역(시골=1, 작은 도시=2, 큰 도시=3)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정치적 변수에는 개인의 이념(진보=1, 보수=5), 정당 일체감(지지정당 없음=0, 있음=1), 현 정부에 대한 지지(매우 잘 못하고 있다=1, 매우 잘하고 있다=5), 그리고 내적 정치 효능감과 외적 정치 효능감(각각 5점 척도)이 포함되었다. 이 변수들 역시 정치참여 행위와 매우 밀접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추가되었다.[10] <표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과 그 측정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2. 분석 데이터의 특성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는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통해 추출된 표본인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6월 23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실시된 면접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1,370명의 유효 응답자가 자료에 포함되었다. 분석 자료의 샘플(sample)에 대한 기본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10) 이 변수들 외에도, 한 익명의 심사자는 최근 한 개인의 정치적 불신이나 무관심을 유발한 '부정적 경험'이나, 이와 관련된 '이슈의 존재 유무'와 관련된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치참여가 단순히 유형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지 혹은 반대 등 무형의 행동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Milbrath & Goel 1977). 따라서 정치참여에 대한 무형의 요인들 역시 분석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분석에 포함되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만을 통제하고자 한다.

www.kci.go.kr

<표 2> 샘플의 특성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성별	남성	655(47.81)	가구소득 (만원)	200 미만	294(21.46)
	여성	715(52.19)		200 이상 400 미만	408(29.78)
연령	20대 이하	284(20.73)		400 이상 600 미만	323(23.58)
	30대	255(18.61)		600 이상 800 미만	143(10.44)
	40대	307(22.41)		800 이상 1000 미만	87(6.35)
	50대	231(16.86)		1000 이상	104(7.59)
	60대 이상	293(21.39)		무응답	11(0.80)
학력	고졸 미만	220(16.06)	거주지역	큰 도시	774(56.50)
	고졸	370(27.01)		작은 도시	449(32.77)
	대재 이상	780(56.93)		시골	147(10.73)
N = 1,370(100)					

▪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

본 연구에서 사용될 샘플의 특성에 대해 사회경제적 조건(socioeconomic status)들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이 655명(47.81%)이고, 여성은 715명(52.19%)로서 그 비율이 다소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대 역시 20대 이하는 284명(20.73%), 30대는 255(18.61%), 40대는 307명(22.41%), 50대는 231명 (16.86%), 그리고 60대 이상이 293명(21.39%)을 차지하는 등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력은 고졸 미만이 220명(16.06%), 고졸이 370명(27.01%), 그리고 대졸 이상이 780명(56.93%)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소득의 경우 200만 원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200만 원 미만은 294명(21.46%),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은 408명(29.78%),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은 323명(23.58%), 6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은 143명(10.44%), 8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87명(6.35%),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은 104명(7.59%)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응답자의 소득 지표로 상정하였는데, 이는 10대 및 20대의 응답자들 중 미취업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과 계층 및 계급에 기초한 선행 연구에서 가구 단위의

www.kci.go.kr

소득 및 재산을 이용한다는 점에 근거한다(이갑윤 외 2013 등). 마지막으로, 주관적 평가를 통한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대한 구분에서는 큰 도시가 774명(56.50%), 작은 도시가 449명(32.77%), 시골이 147명(10.73%)로 집계되었다.

또한 <표 3>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을 보여주고 있다. 네 가지 세부 유형의 정치참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응답 척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나, 본 분석에서는 투표참여와 정당참여가 0에서 1의 값을, 시위참가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이 1에서 4의 값을 가지므로 앞의 두 유형과 뒤의 두 유형을 각각 먼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투표참여가 정당참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시민들 중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대신 주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투표 행위를 통해 제도권 정치참여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시위에 참가하거나 정치인 및 공무원과 접촉하는 행위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수준이었다. 본 분석에서 이용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시위에 참가했던 경험을 가진 응답자는 전체의 약 14%였으며, 정치인 및 공무원에게 직접 접촉함으로써 정치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8%에 지나지 않았다.[11]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독립변수로서 신뢰를 살펴본다. 대체로 국회, 사법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을 나타내는 공적신뢰의 요소들은 평균값이 1점대에 머무는 반면, 우리 사회 전반이나 일반인에 대한 신뢰수준을 보여주는 일반신뢰의 요소들은 2점대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공적신뢰수준보다 일반신뢰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일반신뢰의 경우 일반인에 대한 신뢰수준의 평균값이 약 2.19점 수

11) 비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명, %)

	시위참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지난 1년 동안 한 적 있다.”	47(3.44)	54(3.95)
“그보다 오래전에 한 적 있다.”	143(10.46)	49(3.59)
“전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	374(27.36)	403(29.50)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한다.”	803(58.74)	860(62.96)
합계	1,367(100)	1,366(100)

www.kci.go.kr

준으로, 2.03점의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적신뢰 중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평균값이 약 1.7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약 1.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투표참여	1,337	0.718	0.450	0	1
정당참여	1,370	0.050	0.218	0	1
시위참가	1,367	1.585	0.811	1	4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1,366	1.485	0.747	1	4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1,370	2.036	0.674	1	3
일반인에 대한 신뢰	1,370	2.192	0.747	1	3
국회에 대한 신뢰	1,366	1.292	0.512	1	3
사법부에 대한 신뢰	1,359	1.767	0.650	1	3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1,361	1.492	0.599	1	3
성별(남성=1)	1,370	0.478	0.499	0	1
연령	1,370	2.995	1.428	1	5
학력	1,370	2.40	0.750	1	3
가구소득	1,359	2.729	1.464	1	6
거주지역	1,370	2.457	0.680	1	3
이념(진보=1, 보수=5)	1,364	2.960	1.011	1	5
정당 일체감(있음=1)	1,370	0.613	0.487	0	1
현 정부 평가	1,367	2.467	1.076	1	5
내적 효능감	1,369	2.495	1.104	1	5
외적 효능감	1,367	2.333	1.059	1	5

Ⅳ. 분석 결과

1. 기초적 분석

본 장에서는 본격적인 통계분석에 앞서서 교차분석을 통해 신뢰 유형과 정치참여의 유형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

www.kci.go.kr

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신뢰 유형에 따른 정치참여

		정치참여							
신뢰 유형과 신뢰수준		2014 지방선거 투표참여		정당참여		시위참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우리 사회	상	78.22%	21.78%	5.64%	94.36%	15.77%	84.23%	9.52%	90.48%
	중	71.86%	28.14%	5.09%	94.91%	12.10%	87.90%	6.33%	93.67%
	하	64.16%	35.84%	4.18%	95.82%	16.38%	83.62%	8.36%	91.64%
χ2 test		χ2=14.6877***		χ2=0.6990		χ2=4.4780		χ2=3.7465	
일반인	상	75.38%	24.62%	6.11%	93.89%	12.04%	87.96%	8.72%	91.28%
	중	70.72%	29.28%	4.87%	95.13%	16.15%	83.85%	7.99%	92.01%
	하	66.79%	33.21%	3.26%	96.74%	13.04%	86.96%	4.35%	95.65%
χ2 test		χ2=6.9169**		χ2=3.1539		χ2=4.0712		χ2=5.2671*	
국회	상	83.78%	16.22%	0.00%	100.00%	2.63%	97.37%	2.63%	97.37%
	중	72.67%	27.33%	4.95%	95.05%	12.77%	87.23%	9.63%	90.37%
	하	71.10%	28.90%	5.27%	94.73%	14.74%	85.26%	7.09%	92.91%
χ2 test		χ2=2.9828		χ2=2.1326		χ2=4.9523*		χ2=3.6113	
사법부	상	80.38%	19.62%	6.02%	93.98%	12.12%	87.88%	10.30%	89.70%
	중	71.55%	28.45%	5.49%	94.51%	13.52%	86.48%	7.61%	92.39%
	하	69.34%	30.66%	4.15%	95.85%	15.38%	84.62%	6.46%	93.54%
χ2 test		χ2=7.1762**		χ2=1.4154		χ2=1.3837		χ2=2.6205	
중앙 정부	상	92.96%	7.04%	6.76%	93.24%	9.46%	90.54%	10.81%	89.19%
	중	71.20%	28.80%	4.79%	95.21%	12.31%	87.69%	8.64%	91.36%
	하	70.31%	29.69%	5.10%	94.90%	15.42%	84.58%	6.55%	93.45%
χ2 test		χ2=16.6328***		χ2=0.5242		χ2=3.8054		χ2=3.0807	

▪ *** p<0.01, ** p<0.05, * p<0.1

먼저, 2014 지방선거 투표참여의 경우 일반신뢰의 두 요소, 즉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회, 사법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공적신뢰 역시 그 수준이 높은 시민일수록 투표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치참여 유형인 정당참여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신뢰의 경우

www.kci.go.kr

우리 사회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 모두에서 그 수준이 더욱 높을수록 정당에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공적신뢰의 세 유형은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지 못했다. 즉, 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수준을 가진 시민들이 정당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나, 국회에 대한 신뢰에서는 정반대의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의 경우 정당참여와의 관계에서 일관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위참가에 대해 일반신뢰는 그것의 신뢰수준에 따른 참여정도가 일관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적신뢰에서는 모두 일관되게 국회, 사법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위의 정치참여 유형이 가진 저항적 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시위는 현 정부의 정책이나 정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시민들은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반면,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하는 것이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의 경우 일반신뢰의 유형 중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공적신뢰의 유형 중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들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접촉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투표참여는 일반신뢰와 공적신뢰 모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당참여는 대체로 공적신뢰보다 일반신뢰의 유형과 관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시위참가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은 일반신뢰보다 오히려 공적신뢰의 유형과 관련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통계분석

한국 시민들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가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5>는 그중에서도 '2014 지방선거 투표참여'와 '정당참여'의 유형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모델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4 지방

www.kci.go.kr

선거 투표참여와는 오직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즉 0.1의 유의수준이기는 하나, 투표참여는 일반신뢰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시민들에게서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신뢰의 또 다른 요소인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신뢰의 세 요소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으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의 극복과, 더군다나 대선 및 총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선거에의 투표참여 독려를 위해서 사회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신뢰와 공적신뢰 변수 이외의 분석에 포함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 중에서는 연령($p<0.01$)과 학력($p<0.05$)이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학력 모두 양의 값을 가짐에 따라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정치적 변수 중에서는 정당 일체감을 가진 시민일수록 투표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정당 혹은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모델 2에서는 국회, 사법부, 중앙정부와 관련된 공적신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 일반신뢰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낮은 정당 가입률로부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당 가입률이 하락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당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현실이 본 분석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조한 정당 가입 및 참여수준으로 인해 한국 정치에서 시민들의 정당 가입을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치적 변수 등 개인 차원에서의 수요자 중심적 분석보다 오히려 정당 차원에서의 공급자 중심적 분석이 시민들의 정당참여를 위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시

www.kci.go.kr

사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 투표참여와 정당참여 결정 요인(이항 로지스틱)

변수명		Logit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model 1	model 2
		2014 지방선거 투표참여	정당참여
일반신뢰	우리 사회	0.066* (0.037)	0.027 (0.073)
	일반인	0.089 (0.091)	0.240 (0.181)
공적신뢰	국회	-0.075 (0.169)	-0.398 (0.316)
	사법부	0.016 (0.122)	0.200 (0.218)
	중앙정부	0.043 (0.149)	-0.019 (0.263)
사회경제 변수	성별	-0.014 (0.133)	-0.006 (0.257)
	연령	0.384*** (0.061)	0.178 (0.109)
	학력	0.315** (0.124)	0.458** (0.231)
	가구소득	0.054 (0.050)	0.077 (0.091)
	거주지역	-0.160 (0.107)	-0.348* (0.194)
정치적 변수	이념	-0.104 (0.069)	0.025 (0.126)
	정당 일체감	0.884*** (0.134)	0.362 (0.281)
	현 정부 평가	-0.007 (0.072)	0.075 (0.133)
	내적 효능감	0.081 (0.078)	0.103 (0.143)
	외적 효능감	0.110 (0.084)	-0.125 (0.155)
상수		-1.807*** (0.561)	-4.955*** (1.027)
N		1,302	1,334
Pseudo R2		0.0851	0.0355

▪ *** p<0.01, ** p<0.05, * p<0.1

한편, 사회경제적 변수들 중에서는 학력이 양의 방향으로(p<0.05), 거주지역이 음의 방향으로(p<0.1) 정당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당에 가입하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반면, 큰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정당 활동에 더욱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도시와 시골지역 간 인구 차이에 따른 결과라 여겨진다. 즉 본 연구의 자료상으로는 한국 시민들의 95%가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각주 2 참조), 이들 중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www.kci.go.kr

이어서, <표 6>은 '시위참가'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신뢰 유형에 따라 보여준다. 먼저 모델 3에는 시위참가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술하였듯이, 시위는 저항적 정치참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신뢰와 부(-)의 관계에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사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변수가 가지는 회귀계수의 방향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그것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만으로 국회, 사법부, 중앙정부 등의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위참가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겠다.

<표 6> 시위참가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결정 요인(순서형 로지스틱)

변수명		Logit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model 3	model 4
		시위참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일반 신뢰	우리 사회	0.050 (0.033)	0.038 (0.034)
	일반인	-0.001 (0.079)	-0.097 (0.080)
공적 신뢰	국회	0.028 (0.146)	-0.050 (0.142)
	사법부	-0.041 (0.102)	0.083 (0.104)
	중앙정부	-0.060 (0.127)	0.298** (0.126)
사회 경제 변수	성별	0.190* (0.113)	0.108 (0.116)
	연령	-0.130*** (0.048)	-0.080 (0.049)
	학력	0.556*** (0.108)	0.398*** (0.108)
	가구소득	0.041 (0.041)	0.053 (0.042)
	거주지역	0.127 (0.094)	0.105 (0.097)
정치적 변수	이념	-0.147** (0.059)	-0.139** (0.060)
	정당일체감	0.138 (0.117)	0.237* (0.121)
	현 정부 평가	-0.254*** (0.062)	-0.059 (0.063)
	내적 효능감	0.135** (0.066)	0.188*** (0.067)
	외적 효능감	-0.049 (0.071)	-0.023 (0.072)
cut 1		1.275 (0.472)	2.288 (0.484)
cut 2		2.865 (0.477)	4.317 (0.495)
cut 3		4.398 (0.495)	4.997 (0.505)
N		1,332	1,331
Pseudo R2		0.0628	0.0409

▪ *** p<0.01, ** p<0.05, * p<0.1

www.kci.go.kr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변수에서 시위참가의 저항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시위참가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p<0.01$). 다시 말해서, 현재 집권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시위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진보적 이념을 가지거나($p<0.05$),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시위에 더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성별($p<0.1$)과 연령($p<0.01$), 학력($p<0.01$)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위참가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연령보다 낮은 연령에서,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의 모델 1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투표참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위참가에서는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델 4에서는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우리 사회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일반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적신뢰 중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들이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을 통해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를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여러 기관 및 부처들과 그곳의 공무원들을 신뢰하는 시민들일수록 직접적으로 해당 기관 및 공무원들 또는 지역 정치인에게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적 혹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인 및 공무원에 대한 접촉은 투표참여와 같은 소극적인 정치참여와 달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 유형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반응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주는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이라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적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한편, 모델 4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 중 오직 학력 변수만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였다(각각 $p<0.01$). 즉,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더 자주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변수들 중에서는 이념($p<0.05$), 정당 일체감($p<0.1$), 그리고 내적 효능감($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며, 특정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지니고 있고, 또 내적 효능감이 높은 시민일수록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요컨대,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신뢰의 유형과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투표참여의 경우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의 유형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시민들 사이에서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의 기초적 분석의 결과와 결부지어 설명하면, <표 4>에서 신뢰와 정치참여 간 실시된 교차분석에서는 대체로 신뢰가 정치참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표 5>와 <표 6>에서 실시된 회귀분석에서는 일부 신뢰 변수가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는 있으나, 신뢰 변수보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가 정치참여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12)]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 중 학력 변수는 모든 정치참여 유형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연령 변수의 경우 투표참여와 시위참가에서 각각 차별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투표참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적극적이었으나, 시위참가에서는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변수 중에서는 이념과 내적 효능감이 시위참가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시위참가나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12) 분석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www.kci.go.kr

Ⅴ. 결론: 요약 및 함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간의 연구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관계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설정된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해냈다. 가령 사회적 자본의 범주를 신뢰, 네트워크, 규범성 등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 또는 만약 신뢰만을 포함했다면 신뢰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지, 그리고 신뢰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여 왔다(장수찬 2002; 박희봉 외 2005; 송경재 2013; 이숙종·유희정 2010 등).

본 연구는 한국 시민들의 사회적 자본 중 신뢰에 주요하게 착안함으로써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에 주목하고자 했는데, 특히 신뢰를 일반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일반신뢰는 우리 사회 일반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적신뢰는 국회, 사법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정치참여는 투표참여, 정당참여, 시위참가, 그리고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으로 구분함으로써 신뢰와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시민들일수록 투표참여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사회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더불어 스스로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인의식의 형성에 따른 정치적 효능감의 증진은 공동체 속의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엘리트의 선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골드파브(Goldfarb 2011)는 '작은 것들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작은 규모에서의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가지는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라도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

www.kci.go.kr

이 가능해진다면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생성 및 증대될 수 있고, 이것이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시민들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적 현실에서 과거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대개 투표 행위에만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를 넘어서서 정치엘리트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편지나 청원의 글을 쓴다거나 SNS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개인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일반 시민)와 공급자(정치인 및 공무원) 간 상호작용이 증대될 수 있었고, 본 연구의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은 선순환의 결과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일반 시민들과 정치인 및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사이의 연계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반응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면, 더욱 시민주도형의 참여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로 학력은 모든 참여유형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투표참여와 정당참여뿐만 아니라 시위참가와 정치인 및 공무원 접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끄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학력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가 민주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지함과 동시에 민주적 정치참여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Cho 2014). 반면 연령의 경우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상반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구체적으로, 투표참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적극적이었으나, 시위참가에서는 오히려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사회적 자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횡단면적 자료(cross-sectional date)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www.kci.go.kr

그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즉 특정 시점에서의 응답자 샘플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는, 한국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자 간 관계의 일정한 패턴 및 그 변화의 특징을 추적하는 데 역부족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패널 데이터(panel data)나 시계열 자료(time-series date)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되는 신뢰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했으나, 신뢰가 곧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적 합의와 더불어, 더 나아가 신뢰라는 핵심 요소를 측정하는 대상과 그 방식에 대한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일관된 기준에서의 분석이 지속됨으로써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셋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심화연구의 차원에서 특정한 유형의 사회적 자본의 변동 추세뿐만 아니라 그것의 변동 원인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신뢰와 네트워크 간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이다. 즉 신뢰가 결사체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나(Putnam 1993; Coleman 1990), 그 반대로 결사체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가 신뢰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Brehm & Rahn 1997). 따라서 양자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강원택 (1999).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 지방적 행사 혹은 중앙정치의 대리전?”『한국의 선거Ⅲ』. 푸른길.

_____ (2008). “투표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분석.”『현대정치연구』. 제1권. 2호, pp. 75-102.

골드파브 J. (2011).『작은 것들의 정치』. 이충훈 역. 후마니타스(주).

곽현근 (2007). “개인수준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년 지방선거·2004년 총선·2002년 대선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9권. 3호, pp. 5-30.

김병록 (2011).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지역사회연구』. 제19권. 1호, pp. 1-19.

김욱 (2009).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현대정치연구』. 제2권. 1호, pp. 175-196.

_____ (2010). “촛불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거시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설명.”『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2호, pp. 33-59.

김용철 (2010).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호남지역 독점 현상: 지속과 변화.”『현대정치연구』. 제3권. 2호, pp. 5-35.

김욱·김영태 (2006). “쉬운 참여와 어려운 참여: 대전과 목포지역 젊은이의 가치정향과 정치참여.”『정치정보연구』. 제9권. 1호, pp. 179-202.

김욱·이이범 (2006). “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2호, pp. 89-124.

도묘연 (2015).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 로비활동 제도화 논의의 재고찰.”『평화연구』. 제23권. 1호, pp. 5-46.

박병진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한국사회학』. 제41집. 3호, pp. 65-105.

박상필 (2011).『NGO학-자율·참여·연대의 동학』. 아르케.

박희봉·이희창·김종래·유재원·한인희·차일근·김철수·박병래 (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한국정책화학회보』. 제9권. 4호, pp. 547-575.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관습적·비관습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2호, pp. 221-244.

신소연·이상우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 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제29권. 4호, pp.

www.kci.go.kr

191-232.
우슬러너 에릭 M. (2013).『신뢰의 힘: 신뢰의 도덕적 토대』. 박수철 역. 오늘의 책.
유재원 (2004). “한국도시의 정치사회문화의 특징적 측면.”『한국행정연구』. 제13권. 1호, pp. 89-117.
이갑윤·이지호·김세걸 (2013).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한국정치연구』. 제22집. 2호, pp. 1-25.
이동원·정갑영 (2009).『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이상신 (2014). “사전투표의 명과 암: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보완의 가능성.”『세계지역연구논총』. 제32집. 1호, pp. 33-60.
이숙종·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4호, pp. 287-313.
이영원 (2013). “지역 정체성과 사회자본 구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중매체와 SNS 이용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제57권. 6호, pp. 636-662.
이정희 (1994). “이익집단 구성원의 정치의식과 정치행태.”『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2호, pp. 245-260.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1호, pp. 87-112.
정수현 (2012). “투표율과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제4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한국정치연구』. 제21집. 1호, pp. 27-54.
조기숙·박혜윤 (2004). “신뢰의 측정: 실험과 설문조사의 차이.”『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2호, pp. 95-116.
콘드커 하비불 H. (2004). “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과 신뢰: 싱가포르의 사례.” 이온죽 외.『신뢰: 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 집문당, pp. 65-93.
토크빌 A. (1997).『미국의 민주주의 Ⅰ』. 임효선·박지동 역. 한길사.
홍성모·황진수·류지성 (2011). “사회자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한국동북아논총』. 59호, pp. 291-319.
Berman, Sheri (1997). “Civil Society and the Collapse of the Weimar Republic.” *World Politics*. Vol. 40, pp, 401-429.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p. 241-258.
Brehm, John and Wendy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www.kci.go.kr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 3, pp. 999-1023.

Cho, Youngho (2014). "How well ordinary citizens understand democracy: the case of the South Korean electorate." *Democratization*. Vol. 21. No. 2, pp. 195-219.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S95-S120.

_____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Evans, Peter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Vol. 24. No. 6, pp. 1119-1132.

Foley, Michael W. and Bob Edwards (1996).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Journal of Democracy.* Vol. 7. No. 3, pp. 38-52.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Krishna, Anirudh (2002). *Active Social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Maloney, Willam, Graham Smith and Gerry Stoker (2000). "Social Capital and Urban Governance: Adding a More Conceptualized 'Top-down' Perspective." *Political Studies*. Vol. 48, pp. 802-820.

Milbrath, Lester W. and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Newton, Kenneth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Jan W. van Deth et al. (ed.).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pp. 3-24.

Norris, Pippa, Stefan Walgrave, and Peter van Aelst (2005). "Who Demonstrates? Antistate Rebels, Conventional Participants, or Everyone?" *Coparative Politics*. Vol. 37. No. 2, pp. 189-206.

Hague, Rod and Martin Harrop (1982).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www.kci.go.kr

Hanifan, Lyda Judson (1916).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er.” *Annu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7, pp. 130-138.

Huntington, Samuel P. and Joan M. Nelson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utnam, Robert D. (1976).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New Jersey: Prentice Hall.

_____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1995). “Turning In, Tur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28. No. 4, pp. 664-683.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Books.

Rothstein, Bo and Dietlind Stolle (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Comparative Politics*. Vol. 40. No. 4, pp. 441-459.

Rucht, Dieter (2007). “The Spread of Protest Politics.” Russell J. Dalton et al. (ed.).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708-723.

Van Aelst, Peter and Stefan Walgrave (2001). “Who is that (Wo)man in the Street?: From the Normalization of Protest to the Normalization of the Protester.”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39, pp. 461-486.

Veenstra, Gerry and Jonathan Lomas (1999). “Home is where the governing is: social capital and regional health governance.” *Health and Place.* Vol. 5, pp. 1-12.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Verba, Sidney, Kay L. Schol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Yamagashi, Toshio and Masako Kikuchi (1999). “Trust, Gullibility, and Social

www.kci.go.kr

Intelligenc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145-161.

| **논문투고일** : 2017년 05월 08일 |
| **논문심사일** : 2017년 06월 05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06월 21일 |

www.kci.go.kr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4 No. 2 (2017)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Trust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Gi Dong Kim and Chung Hee Lee
(Dept. of Political Scien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rust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Korean people. Trust, in this paper, is explored into two parts: general trust(on our society and the public) and public trust(on the legislature, judiciary and the executive branch).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re divided into voting, party participation, demonstrations, and contacts to public service providers.

The results of analyses mainly provide three findings. Firstly, trust on our society has positive effects on citizens' voting participation. Secondly, trust on the executive body has positive effects on contacts to public officials. Lastly, while education affects all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sitively, the influence of age shows different direct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 Key words: Social Capital, Trust, General Trust, Public Trust, Political Participation

www.kci.go.kr